"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책임 물어야"

광주 경실련 '남구 보궐선거' 손배소 움직임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광주시 남구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광주 경실련측은 27일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강도석 전 시의원과 관련, 자칫 정치를 희화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정당이 현역 구의원을 시의원 선거에 내보내고, 이로 인해 해당 구의원이 사퇴한 선거구에서 또다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과 출마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 구의원이 시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놓으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도미노' 선거가 반복되고 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천안 경실련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중도사퇴 공직자를 상대로 '보궐선거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정책부장은 "시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행·의정 감시라는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수열 조선대 교수는 "재·보궐 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정치인에게 그 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토록 제도화한다면 불·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책임있는 의정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의원 등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범시민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정례·김노식 추가 소환

檢 30억 외 추가 뭉칫돈 수사 주력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번 주에도 양정례 · 김노식 당선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현재는 양 당선자 주변을 보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소환문제 관련해 "공당의 대표를 부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비례대표 선거 비용으로 42억원을 쓴 친박연대가 양 당선자로부터 15억5천만원, 김 당선자로부터 15억원 등 모두 30억여원을 당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친 김순애씨의 계좌를 추적해 이미 확인된 돈 외에 추가의 뭉칫돈이 당 또는 당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없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돈을 낸 인물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30억여원의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당 계좌를 통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공천 대가성이 쉽게 입증될 수 있는 개인간 돈거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15억5천만원 말고도 10억원 가량을 추가로 당에 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총선 때 친박연대의 홍보대행을 맡은 광고기획사와 홍보물을 찍어낸 인쇄업체가 모두 서청원 대표의 친 · 인척이라는 점에 주목해 계약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6일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소재 비슬산 참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주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불출마' 여 당권 구도 새 국면

朴-鄭 양강구도 깨져 혼전양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전당대회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5일 탈당한 친박 인사들을 전원 복당시켜주면 전대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선 박 전 대표를 당권 주자군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어느 정도 전제한 상태에서 경선 구도를 그려온 당내 주류측도 다소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박근혜 대항마'로서 위상과 자질을 갖췄는 지 여부가 더 이상 주류측 대표 주자의 최우선 요건이 될 필요가 없어져서다.

당초 주류측은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치와 대중적 인기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를 지내고 6선 고지에 오른 정몽준 최고위원을 유력한 대항마로 꼽아온 게 사실.

아직 입당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데다 과거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 걸림돌이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당내에 존재함에도 불구, 박 전 대표와 비슷한 '체급'은 정 최고위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봤기 때문. 그러나 이처럼 박 전 대표가 불출마 입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권 구도는 더욱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후보로 거론돼온 인사들 중 5선에 성공한 김형오 의원, 4선이 되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홍준표, 남경필 의원 등도 '핸디캡'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경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18대 총선에 불출마한 강재섭 대표와 낙선한 이재오 의원의 원외 대표 도전설도 심심찮게 나온다. 만에 하나 지난 번 대표 경선에서 '2파전'을 벌였던 이들이 출마할 경우 전대 구도는 완전히 새롭게 짜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 선거비용 정산…10%, 15% 득표율에 울고 웃는 후보들

200여표 때문에 1억원 받고…못받고…

민노 전종덕씨 15.37% 득표 선거비용·기탁금 전액 보전

광양 유현주씨 258표 부족 50%만 보전…9천여만원 날려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정산이 한창인 가운데 200여표 때문에 1억여원을 번 출마자가 있는가 하면 1억원을 날린 출마자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15%를 득표한 출마자는 법정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과 기탁금(1천500만원)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10%이상 15%미만 득표 출마자는 절반을 보상해주는 규정 때문에 발생했다.

법정선거비용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에 물가변동을 감안해 각 선거구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18대 총선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600만원.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의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은 1억6천여만~2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담양·곡성·구례에 출마했던 평화통일가정당 양우석씨는 4천883표(10.37%)를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액을 보전받게 됐다. 유효득표수의 10%인 4천705표보다 178표를 더 많이 얻은 까닭이었다. 이 178표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2억2천여만원 중 절반인 1억1천여만원을 벌게 한 셈이다.

나주·화순에 출마했던 민노당 전종덕씨도 1만469표(15.37%)를 얻어 간신히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나주·화순 선거구의 유효득표수는 6만8천107표. 따라서 15%는 1만216표였다. 결국 전 후보는 253표를 더 얻은 덕분에 기탁금과 선거비용 2억1천600만원 전액을 보전받게 된 것이다. 253표를 얻지 못했다면 절반액 보전에 만족해야 한 만큼 253표는 1억800만원의 가치를 발휘했다.

광양에 출마했던 민노당 유현주씨는 반면 6천690표(14.44%)를 얻어 선거비용(1억7천여만원)과 기탁금 반액만 보전받는 아쉬움을 남겼다. 광양의 유효득표수는 4만6천321표로 이의 15%는 6천948표였다. 즉, 258표 때문에 9천여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장흥·영암·강진에 출마했던 무소속 곽동진씨는 15.76%, 광주 서을에 출마한 민노당 오병윤씨는 17.71%,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민노당 장연주씨는 17.86%를 각각 득표,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간신히 돌려받게 됐다.

또 광주 광산갑의 민노당 조삼수씨는 10.86%, 광주 서갑의 한나라당 정용화씨는 11.14%, 담양·곡성·구례의 한나라당 김문일씨는 12.79%, 광주 북을의 민노당 김현정씨는 12.2%의 표를 각각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액을 보전받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광주 서을의 정순길, 광주 동구의 김태욱, 광주 광산을의 강경수, 광주 북을의 김천국, 나주·화순의 김창호씨 등은 6~8% 득표에 그쳐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체성 찾자" 민주 계파간 모임 잇따라

재야파·386의원모임 등 역할론·비전제시 등 논의 분주

손학규계·정동영계도 향후 역할·진로 놓고 암중모색중

4·9 총선 이후 통합민주당의 정체성 확립과 당권경쟁을 위한 세력 규합이 활발하다.

창당 수준에 준하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세력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당과 제 정파의 정체성과 역할론은 물론 선명 야당의 비전을 제시할 지도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재야파 모임인 '민주화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25일 모임을 갖고 보수 확산 분위기에서의 진보세력의 역할과 향후 당 지도체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임에는 유선호 최규성 문학진 홍미영 유승희 우원식 이인영 의원 등 15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은 게 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리였다"며 "민주세력의 역할을 위해 외연을 넓히면서 중간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의 공통분모가 약하고 계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끌고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기엔 이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학진 의원도 자료를 내고 "당 대표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합의에 기초한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386 의원들도 이날 저녁 신계륜 전 사무총장 주도로 첫 모임을 갖고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와 진보세력의 진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병두 김태년 조정식 의원 등 14명이 나왔으나 정봉주 이인영 의원은 곧바로 자리를 떴고,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의원 등 전대협 출신 386 낙선자들은 아예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세력으로 등장한 손학규계와 이번 총선에서 대거 낙선한 정동영계 등 각 계파도 향후 당내 역할과 진로를 놓고 암중모색에 들어간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